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패러다임

정상호(서원대 사회교육과/ 정책기획위원)

I. 문제의식

1. 촛불의 비교정치 또는 촛불집회의 계보학
2. 촛불집회인가? 촛불혁명인가?
3. 촛불혁명의 과제
4. 촛불혁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Ⅱ. 촛불의 비교정치

1. 촛불과 한국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키워드이자 톡말로서 촛불
- DBpia: 1,167개의 논문이 검색(2018.5.15 현재)

▪ 검색어 : 전체='촛불'

▪ 자료건수 : 총 1,167개

▪ 연관검색 : 촛불집회 촛불시위 촛불 집회 탄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회운동 탈경계운동 광우병

- 촛불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 온 정치질서에 대한 민주적인 저항(*New York Times*/『미디어오늘』 (2017.3.14.))
- 촛불의 계보학 부재
- 현대민주주의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의 장애물

2. 촛불의 비교정치

	2002년 여중생추모촛불 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16-7년 탄핵 촛불집회
기간/ 규모(명)	-11월-12월 -200만	-3.12-4.15 -100만	-5.2-8.중순 -100회 550만	-16.10-17.4 -23회 1700만
조직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노무현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
계기(발화)	미군 피의자에 대한 무죄평결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MBC 피디수첩(4.29)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사건(10.24)
핵심구호 (주장)	-효순·미선이를 살려내라 -SOFA개정	-탄핵반대 -국회탄핵	-고시철회/협상무효 -이명박(2MB) OUT	-퇴진/하야 박근혜 -이게 나라냐
집회형태	-평일집회 -만민공동회	-평일집회 -1000만 탄핵반대서명	-평일집회 -촛불문화제 -자유발언대	-주말집회 -촛불문화제
참여자	-일반시민, 네티즌	-일반시민, 네티즌 -노사모	-10대청소년 -촛불소녀	-일반 시민 -개인과 가족
정부대응	-이념공세	-중립(고건 권한대행 체제)	-명박산성 -공안정국	-국면전환 사과성명 -개헌과 책임총리제

	2002년 여중생추모촛불 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16-7년 탄핵 촛불집회
언론태도	조중동 대 한경	조중동 대 한경	조중동 대 한경	조선-중앙-한겨레
정당참여	야당 일부만 참여	열린우리당 중심 참여	외면 (강기갑만 환영)	범야당 적극 참여
상징	-근조 리본	-헌법 제1조 -노무현 리본	-헌법 제1조	-세월호 (리본)
시민운동 노동운동	-주한미군철수 -한미관계정상화	-참여 없음	-민주노총파업(6.10) -화물연대(6.13)와 건설노조(6.16) 파업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주도
결과	-주미대사 사과성명	-총선(4.15) 승리 -탄핵 기각(5.14)	-대통령의 사과성명 -추가협약(6.26)	-탄핵과 정권교체 -적폐청산
공통점(1)	-비폭력 평화시위	-비폭력 평화시위 -선거운동기간 집회금 지(4.2)/불복종운동	-비폭력 평화시위 -6월 폭력시위 (연행자 2,500명)	-비폭력 평화시위 -연행자 0명
공통점(2)	온-오프라인의 결합	-개인들의 네트워크	-유연자발집단	-집단지성, 다중

3. 해석과 쟁점

1) 합의된 해석

① 촛불은 기의 상 비폭력 평화시위

- “우리 손에는 낫 대신 몽둥이 대신 촛불이 들렸다. 쇠 파이프 대신 짱돌 대신 촛불이 들렸다. ---중략--- 함께 데모를 하리라 생각도 않았던 손녀와 손을 잡고 손자와 어깨를 껴안고(신경림 “원무”, 2017).
- 촛불은 횃불과 달리 혼자 준비할 수 있으며 어린이나 장애인 같은 존재도 들 수 있다. 어찌면 촛불을 든다는 것은 광장의 정치 또는 집합적 직접행동으로서의 참여 방법의 어떤 임계치 같은 것이다. 결국 촛불의 비폭력성은 가족 단위나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천정환 2017).

② 촛불은 온-오프라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네트워크의 산물

- 시대 조건의 성숙: SNS, 탈물질주의, 지식정보화, 웹 2.0, 전자민주주의
-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참여주체: 촛불시민(정상호 2016), 유연자발집단(조대엽 2008), 집단지성(Levy 1997), 다중(Hardt and Negri 2004)

③ 촛불의 주기적 발발 배경: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결손(신진욱 2017)

- 87년 체제의 대표의 위기(김종엽 2005), 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정치의 출현(이택광 2008), 탈물질주의 시대에 대의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비판과 직접민주주의의 요구(정병기 2017)

④ 성공한 촛불의 조건

- 노무현 탄핵촛불과 2016년 촛불의 공통점: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 + 선거를 통한 광장정치의 제도화

2) 쟁점

(1) 오래된 쟁점의 약화

① 제도정치와 광장정치

0 제도정치 우위론의 이론상 정체

- “촛불집회는 정당과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 또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운동에 집중하느라 정당을 강화하는데 무관심하면 반대편에서 과시즘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최장집 2008).
- 정당은 민주주의, 보통 선거제, 대중 동원 및 중간 조직의 강화, 그리고 지도부의 고도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진보 인사들은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데 매몰되어 있다(박상훈, 한겨레신문 2011.5.28).

0 시민정치의 새로운 가능성

- 최장집 등 제도학파가 한국 정치의 위기. 이유인즉 “양당체제의 복원이라는 의제의 신화화에 구속되어 있는 이들의 민주주의이론은 이제 낡은 보수주의” 이기 때문. “그들은 광장에서 이론을 구성하지 않고, 이론에서 광장을 유추(이명원 2008).

0 2016년 촛불은 선 순환 또는 매개 고리에 대한 고민과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단계로 진전

- 정치학자의 의무는 ‘광장의 정치인 촛불집회’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오창은 2008, 36-7).
- “촛불이 풀어야 할 과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상시적으로 작동시켜 국민의 의견이 국가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김동성 2008, 230)
- - 국회개헌특위(2017.2)의 최종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 개헌안(2018.3)

② 촛불시민인가 다중인가 :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주체에는 동의

0 다중

- 2008년 이후 촛불의 참여 주체에 대한 새로운 명명.
- 촛불은 어떤 선동적인 계기도 없이 오로지 자발적으로 참가한 대중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스스로 동원된 자’ 들이라는 의미에서 자발적이며, 그들의 이러한 자발성은 또한 자연스럽게 자율성과 결합하면서 어떠한 관리와 지도도 거부하는 모습(조정환 2009, 55).
- 다중이 계급·민중 같은 전통적 저항주체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자체에 대한 열광의 산물이었다면, 촛불은 그런 다중이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능멸과 혐오의 시대를 견디다 광장에 다시 모인 정동적 주체인 것(김성일 2017).

0 (촛불)시민

- 자본주의 또는 제국을 타파하려는 혁명적 의식을 갖기보다는 일상의 요구를 제기한 보통 시민들이었고, 사회적 노동자라는 경제적 범주로 묶여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공적 의제를 토의하고 실천했던 평범한 시민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오현철 2010)
- 촛불시위의 본질은 공권력을 그 목적에 반해 행사함으로써 신의 계약을 위반한 국가권력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박찬표 2017).
- 촛불집회는 선진국과 달리 국가와 개별 시민 사이에서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매개할 중간 집단 혹은 결사체가 빈약한 한국에서 국가와 개인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송호근 2017)

(2) 새로운 쟁점의 부각과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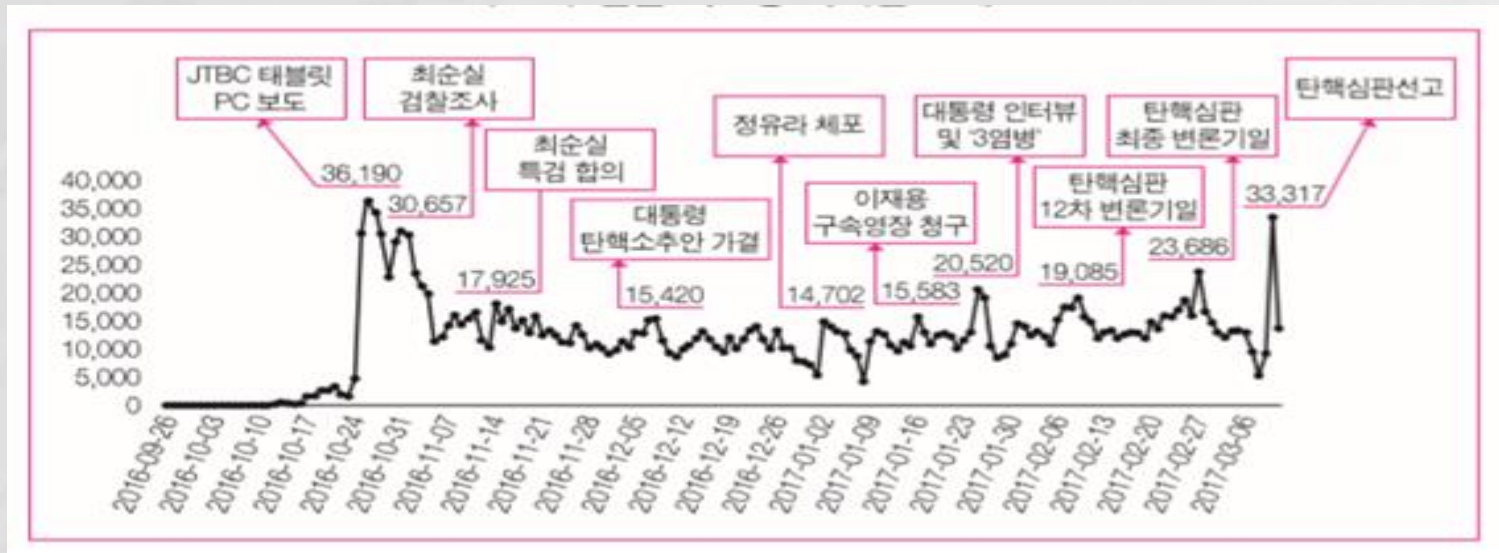
① 비폭력 평화시위에 대한 해석

- 이번 촛불집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이 이번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을 2017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도 이를 입증.
- 하지만 반론도 존재. 2008년 6월에 등장한 비폭력/평화담론은 성장보다는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자연적 군중에서 열린 군중으로 폭발하던 군중의 형태를 닫힌 군중으로 폐쇄시키는 것(이득재 2008,97)
- 비폭력 법치주의라는 담론의 유포는 다양한 다른 형식의 시위와 저항 행동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구조적 차원에서 불균등한 권력관계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되는 폭력에 관한 인식을 배제하는 효과(노형일, 양은경 2017, 34).

→ 세월호 사건과 일촉즉발의 군사충돌이 구조화된 분단체제로 인해 비폭력/반전/평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라는 점에서 적극 인식, 수렴할 필요가 있음.

② 20016촛불의 언론 대연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과거 촛불에 대한 보수언론의 반응: '디지털 마오이즘'(동아일보.2008.5.6). 광우병 인터넷 괴담, 촛불집회는 도심테러, 미성숙한 10대와 그 배후세력 등등/ 촛불민심의 편에선 우익 언론, 혁명적 변화라고 부를 만한 격변(서영표 2017, 66).



- 무슨 일이 있었나?
- 권력내부의 갈등과 균열: 측근과 비선실세에 대한 편애로 지배 블록을 무시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대응 아니면 친박 세력으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보수세력의 재집권 전략: 거국중립내각-개헌-야권분열-재집권 시나리오(김동춘 2017, 210)
- 의도보다 중요한 결과(snowballing effect). 보수독과점 언론시장의 정상화와 공론장의 복원을 위한 제도적 관점(언론개혁)에서 접근할 필요.

Ⅲ. 촛불집회인가? 촛불혁명인가?

1. 촛불혁명에 대한 신증론 또는 부정론

- Skocpol(1979)의 고전적인 혁명의 정의(혁명은 한 사회의 국가 및 계급구조의 급격하고 기본적인 변혁이 아래로부터의 계급반란(class revol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를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수반하는 체제 전환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는 촛불집회(시위)나 광장의 정치, 또는 항의집회(도묘연 2017, 11)나 사회운동(권영숙 2018)으로 접근.
-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생산관계와 자본축적 동학을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변형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박근혜의 퇴진과 몇몇 핵심 관련자의 처벌만으로는 혁명을 논하기에 부족(김공회 2017, 60).
- 불완전성. 미완의 혁명: 엘리트 관료 및 재벌 중심의 대자본에 기초한 권력기반과 시민과 대중의 사회적 주체성을 끊임없이 억압하며 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권력의 작동방식은 그대로 존속(김정주 2016, 83).

○ 촛불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혁명이 아니다(권영숙 2018, 72).

- 우선,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축이었던 촛불시위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복원시켰다. 촛불시위는 현존 정치체제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하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망친 원인으로 ‘국정농단’ 을 지목하고,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로 표현되는 국정농단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 을 외쳤던, 말하자면 체제 수호 운동이었다.
- 다음으로, 그것은 국가 혹은 사회체제의 변혁을 가져오지 않았다. 촛불시위는 국가를 변혁하거나 전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국가’ 화하려는 시도다. 그것은 ‘실패한 국가(the failed state)’의 원인을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에서 찾았고, 권력을 사유화 한 통치자를 제거함으로써 국가를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촛불시위는 일상이 있는 시위였다. 일상성을 파괴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22차례 개최된 집회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여 제도화된 방식으로 헌정질서를 회복시켰다. ‘축제로 명명되긴 했지만 ‘광기의 순간’, 혹은 혁명인 순간은 도래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히 혁명이 아니라 사회운동이다.

2. 왜 '촛불'혁명인가?

- 인식의 전환이 필요: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혁명
 - 필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 “촛불혁명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촛불’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한 ‘혁명’이라는 단어 앞에 바리케이드처럼 세워놓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들(민주주의 혁명, 주권혁명, 시민혁명 등)이 필요(이승원 2018, 230).
 - 오히려 촛불의 의미와 상징이 혁명의 고전적 인식과 견해의 전환을 가져올 것. 21세기 한반도에서 혁명은 폭력, 급변과 단절, 전위가 아니라 평화, 지속성, 시민 참여에 의해 수행될 것.
- 촛불혁명과 체제 전환(regime shift)
 - ① 체제의 의미(Pempel, 1998: 20-25)
 -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연합(dominant coalition)
 - 중요한 정치경제적 제도
 - 핵심적인 공공 정책의 장기 지속성
 - ②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 1994)의 정의
 - 레짐은 특정 영역에서의 정책결정 절차로 행위자의 기대를 수렴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자들
 - ③ 본 연구에서는 레짐을 지배연합, 핵심 정치경제 제도, 이념(규범), 국제체제로 규정.

3. 87년 체제를 넘어서: 촛불혁명의 시작

		87년 체제	촛불혁명
지배연합		재벌-관료의 보수 연합	개혁적 자유주의 연합
제도	정치	다수제 모델	합의제 모델
	경제	신자유주의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국가
이념		반공과 성장주의(물질주의)	자율과 연대(탈물질주의)
국제체제		적대적 대립체제(휴전협정)	평화공존체제(평화협정)

1) 지배연합의 해체: 개혁적 자유주의 연합

- 87년 체제를 지탱해온 수구 기득권세력은 재벌-관료-언론-보수정당의 동맹체임(김정주 2016, 93; 이광일 2017). 특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탈법적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등 재벌과 결탁해 이미 심각한 재생산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서민 대중의 삶을 악화(헬조선)시켰음.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100대 국정과제 중 24: 재벌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20대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전략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대표하는 자유-시민동맹(Lib-Civicism) 또는 자유-노동연합(Lib-Labism)의 비전과 지향을 갖고 있음.

2) 핵심 제도와 정책: 경직된 다수제 모델에서 유연 합의제 모델로의 전환

	다수제(majoritarian)모델	합의제(consensual)모델
지향 원리	권력집중-효율성	권력분산-참여
헌정체제 (헌법+정당)	-단순다수소선구제(병립형) -보수독점의 양당제 -중앙집권국가 -단원제 -경직된 대의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연동형) -온건다당제(진보-중도-보수) -지방분권국가 -양원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2018. 3.23)하였던 개헌안은 참여와 분권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 제44조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 제45조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3) 이념: 박정희 반공-성장주의의 종식

- 촛불혁명의 가장 큰 성과는 박정희 신화라는 근대화 과정의 ‘시민종교’의 파산(김학준 2017, 74)
- 촛불혁명과 박정희 신화의 몰락(손호철 2017, 29)
 - ①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결과.
 - ② 이 같은 개발독재는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최선의 선택.
 - ③ 현재도 박정희의 개발독재모델은 침체된 한국경제에 또 다시 고도성장을 가져다 줄 것.
 - ④ 현 시점에서 개발독재의 재도입은 바람직함.
- 이념과 가치의 변화: 탈물질주의 시대와 세대로의 진입
 - 촛불을 통해 환경우선주의, 탈물질주의, 탈전문가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의 가치 지향이 지속적으로 성장(정태석 2018, 47).
 - 촛불집회 참여자들의 가치 지향은 탈물질주의·개인주의(조기숙·박혜윤 2008)
 - 탈물질주의 사고는 촛불집회 참가자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서도 높게 나타나 68혁명운동이 젊은 세대들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국민적, 사회적 토대가 튼튼하다는 점을 주목(정병기 2017, 282).

4) 촛불혁명과 평화협정체제

- 상상력에 권력을

- 촛불혁명의 과제는 첫째, 60년 이상 지속된 한미군사동맹의 재검토와 그것을 통한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김동춘 2017, 220).
- 광장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분출되는 반역의 공간(김성일 2017, 155).
- 촛불혁명의 과제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안보위기를 해결하고 그간 중단된 남북한 교류협력의 복원(김종엽 2017, 3).
- 비상국가체제에서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 하고 정상인 수교 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한반도 양국체제(김상준 2017, 76).

Ⅲ. 촛불혁명의 과제: 성찰의 시간

- ‘열망(저항)과 좌절의 사이클’(최장집 2002)
 - 우리 사회는 거리와 광장에서 분출하는 시민의 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민주주의만을 성취했을 뿐. 과거의 경험이 대개 아주 제한적인 변화만을 동반한 일종의 ‘수동혁명’으로 귀결.
 - 원인은 좌파 정치세력의 무능과 타협적 태도(서영표 2017, 68).
- ‘마(魔)의 순환 고리’ ‘독재의 반복 고리’ (김상준 2017, 81).
 - 4.19도, 87년 민주화도, 각각 이후 30년에 걸쳐 그리고 결국은 강고한 독재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사실. 거대한 민주 열망을 냉혹한 독재체제가 회수하는 불쾌한 역사적 순환.
 - 분단체제론과 독재정권의 이적단체론이 상호를 적으로 간주하여 투쟁하는 상승 순환 구조에 기인.
- 골키퍼 없는 데도 득점하지 못한 진보개혁세력의 무능(한홍구 2017)
 - 1987년 6월 항쟁, 1997년 외환위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 세 번의 기막힌 기회를 놓쳐 버림.
 - 촛불혁명으로 찾아온 네 번째 기회. “또다시 죽 썰서 개 줄” 것인가?

1) 개헌 없는 혁명은 없다

- 독재국가에서도 정당은 있지만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음. 마찬가지로 위로부터의 신임투표(plebiscite)처럼 모든 개헌이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개헌 없는 정치혁명은 있을 수 없음.
- 촛불혁명의 본격적 실현 또는 궁극적 완성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의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헌의 성사에 있음.

● 평화협정체제와 개헌

-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교과서 집필기준(교과서 집필기준)은 다가올 평화협정체제와 모순됨.

● 지방선거와 총선이 중요

-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선거 승리가 필요
- 21대 총선(2020)은 이번에 발의한 개헌(안)을 뼈대로 개헌세력 대 反 개헌세력이 정치지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중대 선거가 되어야 함.
- 정부는 개헌의 방식과 일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천명과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해야 함.

2) 촛불혁명의 또 다른 명령,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피

- 촛불은 일관되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외쳐 왔음
 - 진보개혁세력의 성찰의 출발점은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신자유주의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의 대처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
 - 2008년과 2016년 촛불의 저변에는 부정부패와 소통 부재에 대한 정권 비판만이 아니라 공공성 위기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깔려 있음.
 - 2008년 촛불집회의 10대 청소년의 핵심 주장은 ‘미친 소, 미친 교육(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야간 자율학습 부활) 반대’(이해진 2008, 70).
 -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뿐 아니라 언론개혁,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의 요구사항이 나왔고, 2016년에는 세월호, 국정교과서 폐기 등의 주장이 등장하였음.
- 책임총리나 책임장관이 아닌 ‘경제대통령’의 시대
 - 남북문제와 달리 경제는 통치자의 결단만이 아닌 제도 개혁의 문제
 - 개혁 성과는 진보적 장관의 포진 여부(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지, 라인업의 조율이 중요.
 -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대한 안주가 아니라 고용과 분배의 가시적 성과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각별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

3) 촛불의 제도화 방안: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및 심화

- 후기산업화와 탈물질주의라는 시대 조류를 적극 인정하자!

	산업화	후기산업화
영향	관료화, 세속화, 합리화, 중앙집중화	자율성과 자기표현 가치
권위의 정향	권위의 세속화	권위로부터의 해방
목표	기아감소와 수명연장을 위해 물질적 산출의 극대화	좋은 생활과 경험의 질을 중시
균열	사회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균열	문화적 이슈와 삶의 질에 기반
핵심 이슈	성장	환경보호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후기산업화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일방적 명령과 통제, 획일화보다는 시민들의 자기표현 가치(self-expressive values)를 증진시킨다는 점. 또한 보다 엘리트에 도전적이고, 이슈 지향적이며, 그리고 시민 행동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있음.

- 촛불혁명은 좋은 시민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

- 투표와 납세, 준법을 강조하는 시민적 의무(citizen duty)에서 타인 배려, 독립적,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참여적 시민(Engaged citizenship)의 강조

- 민주주의와 정부의 관계도 변화: 계몽 군주 또는 훈육교사에서 가이드로
-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제도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길잡이 역할
-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중앙정부는 숙의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미투와 갑질 근절 등)를 확대하는 분업체계가 바람직.
- 촛불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해답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및 심화. 지방정부는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중앙정부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확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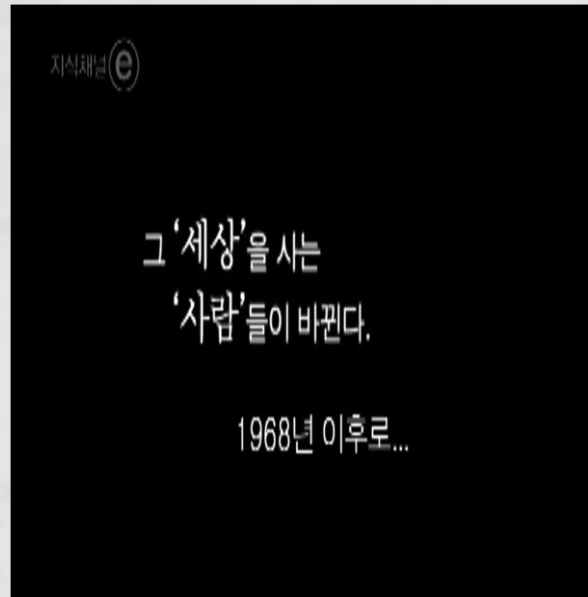
구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 시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입법 시민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시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시민청원, 숙의와 시민배심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혁명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시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2)를 본 발표의 취지에 맞게 변용함

IV. 결론: 촛불혁명과 후기 근대화 시대의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

- 촛불이 바꾼 시민의 개념: 우물(市井)의 시민에서 광장(廣場)의 시민으로!
 - 시민의 유래에 해당하는 시정은 중국 상대(上代)에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유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이 말은 상점이나 점포가 늘어난 거리 또는 상인의 낮춤말인 장사치를 일컬었으며, 점차 후기에 이르러서는 궁성(宮城) 밑에 사는 백성이나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서민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
 - 동양에서 시민은 육의전(六矣廛)의 상인 또는 저자(市井)의 백성(정상호 2013), 서양은 성안에 사는 상인과 수공업자(Burger),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bourgeoisie)의 의미.
 - 촛불은 시민의 의미와 본질을 토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 또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국의 주권 시민으로 진화시킴.
- 촛불혁명을 독창적인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로 정립!
 - 대한민국은 민족국가의 수립도, 근대화와 산업화도, 민주화도 뒤늦게 출발하여 서구 모델을 압축적으로 추격하여 왔음.
 - 아테네 민주주의 이래 각국은 자국의 역사와 제도에 맞는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켜 왔음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 의회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트 모델,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모델, 다양한 결사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다원주의 모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한 북유럽의 민주적 조합주의 등등.
 - 촛불은 더 이상 ‘집합적 열정의 찰나적 분출’이 아니라 21세기의 4반세기 동안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창의적인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로 인식해야 함.

- 민주주의와 평화의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김상준 2017, 70)
 - 한국의 촛불혁명이 세계가 놀랐던 이유는 그것이 연행자 0명의 평화집회였기 때문만은 아님. 그보다는 세계 곳곳에서 기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한계와 오작동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 이를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돌파하는 새롭고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음.
 - 촛불혁명의 에너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선진국’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는 후발자의 것이 아니라 정체와 퇴행에 빠진 세계 민주주의 상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보다 고양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힘.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17. “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을까?_정치적 소비주의 외.” 『인물과 사상』 .(233), 38-79.
- 권영숙. 2018.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경제와 사회』 . 62-103.
- 김공회. 2017.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 14(1). 44-71.
- 김동춘. 2017.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 정치의 새 국면.” 『황해문화』 . 202-220.
- 김상준. 2017.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목표.” 『사회와이론』 . 6390.
- 김선택. 2017.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 『공법학연구』 . 18(4), 85-109.
- 김성일. 2017. “광장정치의 동학.” 『문화과학』 . 89, 146-168.
- 김왕배. 2017.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 7-59.
- 김윤철, 서복경, 이승원, 이철희, 김건우 2018.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 이었다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시민과 세계』 . 225-247.
- 김정주. 2016. “촛불의 저항에서 대항 헤게모니로.” 『진보평론』 . (70), 83-101.
- 김종엽. 2008. “촛불항쟁과 87년체제.” 『창작과 비평』 . 36(3), 36-59.
- 김종엽. 2017. “촛불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향하여.” 『창작과 비평』 . 45(2), 2-9. ③
- 김철규, 김선업, 이철.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 『경제와 사회』 . 40-67.
- 김철규, 이해진, 김선업, 이철. 2010. “촛불집회 10대 참여자의 정체성과 사회의 식의 변화.” 『경제와 사회』 . 265-290.
- 김태우. 2017. “6월항쟁의 재구성.” 『창작과비평』 . 45(2), 364-381.
- 김학준. 2017.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촛불 민의.” 『황해문화』 . 60-75.
- 노형일, 양은경. 2017. “비폭력 저항 주체의 형성.” 『한국방송학보』 . 31(3), 5-41.
- 도묘연. 2017.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 10(2), 5-41.
- 박성진. 2017. “촛불의 시민성: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시민과 세계』 . 1-25.
- 박영신. 2017. “공공 분노에 대하여.” 『사회이론』 . (51), 1-29.
- 박창문. 2011. “한국형 디지털 집합행동의 특성과 변화 양상: 2002년과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 경 16권 0호 247-276
- 서영표. 2017. “변화를 향한 열망, 하지만 여전히 규율되고 있는 의식 - 2016년 촛불시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 14(1), 65-90
- 손호철. 2017. 촛불혁명과 2017체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신진욱. 2016. “한국에서 결손민주주의의 심화와 ‘촛불’ 의 시민정치.” 『시민과 세계』 . 1-26.

- 이광일. 2017. “그들이 대중을 다루는 아주 오래된 방식: 촛불은 보수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넘을 수 있을까.” 『문화과학』 . 89, 169-188.
- 이득재. 2008. “촛불집회의 주체는 누구인가.” 『문화과학』 . 55, 90-109.
- 이재철. 2017. “2016년~2017년 촛불집회의 정치적 향의.” 『사회과학연구』 . 24(4), 61-82.
- 이정엽. 2017. “문화 투쟁과 투쟁의 문화: ‘촛불’ 과 ‘태극기’ 의 문화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 . 67, 38-51.
- 이지문. 2016. “촛불의 제도화 차원에서의 추첨의회 모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731-752.
- 이택광. 2008. “촛불집회,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인물과 사상』 . 52-63.
- 이해진. 2008.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 『경제와 사회』 . 68-108.
- 정병기. 2017. “68혁명운동과 비교한 2016/2017 촛불 집회의 비판 대상 과 참가자 의식.” 『동향과 전망』 , 261-291.
- 정상호. 2016. 『시민의 탄생과 진화』 . 한림대학교 출판부.
- 정태석. 2018. “87년 체제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가치들의 변화.” 『경제와 사회』 . 18-61.
- 천정환. 2017. “누가 촛불을 들고 어떻게 싸웠나.” 『역사비평』 . 436-465.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후마니타스.
- 최장집 · 박찬표 · 박상훈. 2008. 『어떤 민주주의인가』 . 후마니타스.
- 최재훈. 2017.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 사회』 . 113, 66-99.
- 한홍구. 2017. “촛불과 광장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 . 45(1), 301-328.
- 허태회, 장우영. 2009. “촛불시위와 한국정치.” 『현대정치연구』 . 2(1), 33-53.